

건설소식

건설재해 갈수록 는다

올 들어 1만 1,000여명...
추락사고 가장 많아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건설분야 재해자는 1만1,1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474명)에 비해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는 398명으로 작년보다 12.1%나 늘었다. 이 가운데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사고성 사망자는 34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2%나 증가했다.

건설근로자수(339만명)를 감안하면 재해율은 0.33%, 1만명당 사망률은 1.17%다.

전체 산업재해(5만5,398건)의 평균 재해율(0.41%)보다는 낮지만 사망률(1.09%)은 높았다.

건설현장 사망원인은 추락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1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발 20명, 화재 20명, 사업장의 교통사고 19명, 낙하·비래(물체가 날아와 발생한 재해) 16명, 전도 15명, 끼임 11명 등이다.

상반기의 재해자수가 9,182명(사망자 3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7월에만 1,922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하루 2명꼴로 사망자

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건설재해는 5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14명이나 사망해 이들 현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추락, 전도, 끼임 재해를 2012년까지 50% 감축하기 위해 재해 유형별 원인에 대한 예방기법을 보급하고 재해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 선진화, 국가적 차원 추진

노동부, 재해예방 패러다임 전환

| 노동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화하면서 범규이행 지도감독 위주의 기존 방법으로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재해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과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대응방법이 필요하다”며 사회 각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문화를 선진화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최근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원년 선포식



을 갖고 앞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관리 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원년 선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 기법의 보급, 확산과 사회 주도층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증진 캠페인 전개, 국민이 공감하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추진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보건문화 증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강조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와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정신을 살려 안전문화 활동이 문화로 정착되는 안전문화 성숙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공정위, 관련법 개정안 마련... 내달부터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로

10월부터 발주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공포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발주업체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 관련 서류를 보존토록 했다.

특히 하도급계약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은 공정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율적인 하도급대금 조정을 가능하게 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지난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중견건설사들은 정부도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업체들의 사업비 증가분 부담 요청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하세요

노동부, 미가입 사업장에 권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

해 10월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상 처리나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때 전액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건설현장도 산재보험 혜택 적용

노동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영희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업

무보고를 통해 사회보험 수혜범위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 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 적용 대상공사를 확대한다.

그동안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 건축공사나 대수선공사는 산재 적용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제외대상을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이나 200㎡ 이하 대수선공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여건 변화에 따라 안전보건 기준을 업종과 유해위험요인별로 세분하는 등 예방법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고용동향 전망과 관련 “경기 하강 우려에 따라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가 19만 1,000명에 그쳤다”며 “하반기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고용사정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2단계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접속안 해도 입찰정보 확인

앞으로는 나라장터에 접속하지 않고도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입찰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신저서비스는 나라장터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찰정보를 개인PC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메일링 서비스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메일시스템에 접속한 후 메일을 수신하는 것과 달리 메신저는 프로그램에 로그인만 하면 신규 메시지 수신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줘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쉽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나라장터에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업체 사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에서 해당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메신저서비스는 입찰, 투찰 마감시간을 알려주는 알람기능 외에 일정관리, 업무노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의 IT 트렌드 패러다임에 맞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나라장터 사용자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인증 받아

건축환경설비 등 3개 분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건축환경설비·특수용접·건축목공 등 3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으로 인증 받았다.

기술교육원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와 기술자격 인증시험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인증제’는 시험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해 활용하는 제도다. 기술교육원은 이번 인증시험장 유치로 인해 재학생들은 물론 교육원에서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사 임직원들의 자격취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고층빌딩, 엔지니어링 미래 이끌 4인방 중 하나

초고층빌딩, 신재생에너지플랜트, 재해예측 및 대응시스템, 자원순환시스템 등이 미래 엔지니어링산업을 이끌 핵심기술로 선정됐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상 4개 분야를 중장기 엔지니어링 기술로드맵 대상분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중요 기술분야도 많지만 경제성이나 공공성, 전략적 중요성, 현 기술 수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개발·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고층빌딩 분야는 국내 업계의 해외 진출 등 국제적 수주경쟁의 필수조건으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환경·공조·위생 등 설비기술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신재생에너지플랜트 분야는 최근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국내 건설·플랜트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해서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정됐다.

끝으로 자원순환시스템은 증가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경부와 엔협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로드맵 수립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양열·지열... 신재생 에너지 시설사업 확대

서울시, 2010년까지 전국 평균 2.1%까지 높이기로

서울시는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현재

0.6%)을 2%까지 높이기로 하고 관련 시설사업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전국 평균 2.1% 수준으로 오는 2010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강원(4.4%), 충북(4.2%), 전남(3.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2.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돼 왔다.

시는 우선 구청·동사무소·보건소 등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재 5%에서 오는 2010년까지 10%로 높이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3,000㎡ 이상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은평뉴타운 내 임대아파트단지(127가구)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단지에 태양광 발전으로 지하주차장 전등, 실개천 유지용수 펌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지 내에 지열을 이용, 아파트관리사무소·노인정·유아원 등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추후 관련시설 확대를 위한 여타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중소기업 원자재 대금 대출 5천억 공급

일반대출 대비 최고 1.4%p 금리 우대

농협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의 한도로 하는 ‘NH원자재구입론’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NH원자재구입론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공급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기간 연장을 통해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협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대출 영업점장 금리우대 한도에 0.4%p를 추가, 최고 1.4%p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일반대출보다 평균 2.69%p 금리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을 향후 4,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하반기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전국 기업 금융지점에 ‘NH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덧붙였다. ●